

전주시, '쓰레기 배출제 7월부터 달라진다'

오후 6시 이후~오전 6시 배출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 ·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전주시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또, 재활용쓰레기도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청소행정 혁신, 지속 가능한 깨끗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아무 때나 배출된 쓰레기를 일몰 후에만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각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쌓여있는 쓰레

기로 인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품목 구분 없이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 일몰 후에 주 2회 배출토록 변경됐다.

재활용쓰레기는 동별로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일요일과 화요일로 주 2회 배출하고, 배출 품목은 플라스틱·병류·금속류와 투명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양일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시는 각 가구별로 상시 비치해둘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지정 요일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적용대상은 전제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 여 세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방안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언론홍보와 안내문 배포, 시민참여 캠페인,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

침이다.

시는 오는 7월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 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에 대한 계도에 나서는 등 올바른 배출 방법 숙지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일상감사로 예산 절감 효과 거둬

전주시, 지난해 총 880건 일상감사 157억원 예산 절감

전주시가 적극적인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각종 공사 372건과 용역 351건, 물품구매 157건 등 총 880건(4748억9000만 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절차와 예정원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약 1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시 사전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과 도로, 공영, 하천, 체육시설, 도서관 등에 대하여 현장 위주의 기동 감찰 및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차례에 걸쳐 시공 중인 공사 현장 218건과 시민불편사항 307건을 점검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하도록 계약심사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간도 원가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던 국·도비 보조사업(보조금 교부 조건에 원가심사 명시된 사업은 제외)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인식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부담과 건설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상감사와 현장 위주의 기동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구도심 교통체계 구축 최선

우범기 전주시장, 시내 중심도로인 충경로 보 · 차도 개선 구간 등 현장 행정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보행환경 특화거리(병무청오거리~충경로사거리) 조성 현장,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공사(충경로사거리~다가교사거리) 현장 등을 찾아 각각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불편 해소,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신속한 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우 시장은 충경로 KT플라자 앞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현장에서 공사 추진사항 및 교통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어 우 시장은 다가교로 이동해 기존 도로를 보 · 차도의 구분이 없는 광장 형태의 도로로 재정비하는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청사진과 사업 구간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보행환경 특화거리(병무청오거리~충경로사거리) 조성 현장,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공사(충경로사거리~다가교사거리) 현장 등을 찾아 각각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우 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해당 구간의 공사가 재개될 예정인 만큼 시

민들이 교통 및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를 추진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내 중심도로이자 주요 교통 요충지 중 하나인 충경로는 전주광역시내의 인접 도로이자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구도심 도로인 이곳을 인도와 차도의 단차가 없는 광장형 도로로 개선해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그간 동절기를 맞아 공사가 중지됐으며, 이달 중순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시는 전체 구간 중 차도부의 경우 오는 4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이번 개선 구간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 중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치해달라"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맡은 업무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책 가동

전주시, 산불감시 근로자 총 143명 산불 취약지 등 배치

전주시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했다.

시는 본청과 완산·덕진구청에 3개소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진화차량과 드론 등 진화장비를 갖춘 산불감시 인력 총 143명을 산불취약지 등에 배치했다.

민약의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의 정확한 상황판단 및 신속한 진화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운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명과 한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등 주요 시기와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어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산불 발생시에는 긴급재난 문자·방송 등을 활용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산불발생지역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산불취약지 내 소각금지 경고판과 깃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과 버스 정보시스템(BIS), 시내버스 캠프 등을 활용한 각종 홍보를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에 통장회의 등 자생단체 회의 시 산불예방 홍보와 전광판 활용 홍보물구 송출을 요청했다. 또, 산불 발생에 대비해 안전정책과와 시청총무과와 완산·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시보건소·덕진보건소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제22대 총선' 관련 3개 체육시설 휴장

화산체육관 · 어울림국민체육센터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운영하는 일부 체육시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휴장한다.

공단에 따르면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선거 공보 등 접수 및 보관 장소로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활용된다.

이 기간 체육센터는 휴장하며, 시설 보수 공사와 환경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산체육관의 경우 1층 배드민턴장

이 완산구 개표 장소로 쓰여 다음 달 3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9일간 휴장한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0일은 지하 배드민턴장을 포함해 체육관 전체가 휴장한다.

덕진실내배드민턴장은 덕진구 개표

장소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6일간 휴장한다.

강을원 체육관운영부장은 "휴장 기간을 활용해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신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